

『평화체제 이후 한반도의 미래 전망』
-사업결과 보고서-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평화체제 이후 한반도의 미래 전망 (Geopolitics of Post-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기관명: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에 따른 역내 질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당면 과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이후의 가능한 미래를 전망할 필요성이 대두됨.
- 미중 패권경쟁으로 대표되는 세계 질서의 변화와 지정학적 충격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만 매몰되어 임박한 남북관계 및 지역에 국한되는 기존 연구의 한계가 지적됨.
-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국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입체적 해석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나, 이러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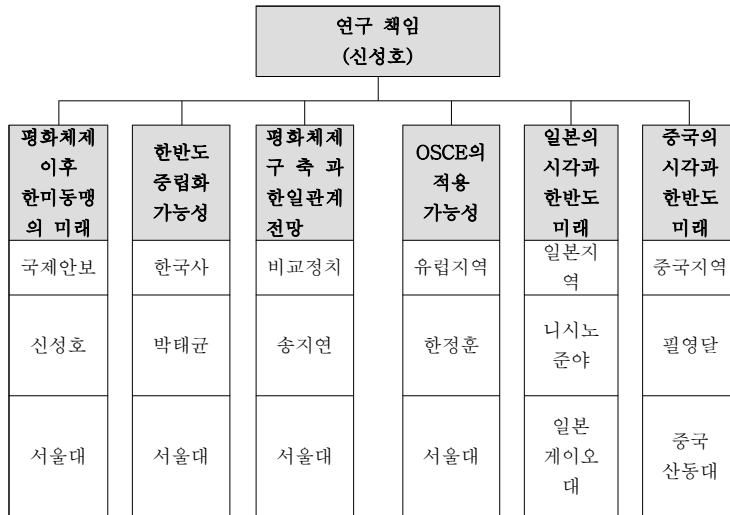
○ 목적

-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비하여, 미중 패권경쟁 등 지정학적 환경변화 외에도 한반도가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
-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하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조망하고, 과거 한반도 역사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질서 제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며, 현재 한반도에 펼쳐져 있는 정치/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여 복합적 해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일본 및 중국 등 주변 주요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를 통해 주변국의 시각이 반영되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였음.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 연구원들은 평화체제 이후의 한반도와 관련하여 국제안보, 중립화, 지역협력, 비교정치, 정치경제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주제별 연구를 수행하였음.
- 추진 체계



- 연구자 간의 공동 워크숍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 1회, 일본 및 중국에서 현지 전문가와 간담회를 총 3회 실시하였음.
- 과거 연구를 통해 구축 중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자의 pool을 확장하여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를 위한 플랫폼으로 구축하였음.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19. 6.	중국 산동대 현지 간담회 1차 진행
2019. 11. 26.	서울대학교 연합학술대회
2019. 12. 19.	일본 게이오대 현지 간담회 진행
2020. 1. 13.	중국 산동대 현지 간담회 2차 진행
2020. 1. 30.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관련 워크숍 진행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19. 1/4분기(6월): 중국 산동대에서 현지 전문가와 간담회 실시
 - 연구 중간보고 및 향후 서울에서 실시할 워크숍 관련 준비회의 진행
- 19. 11. 26.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실시:
 - 평화체제 이후의 한반도 주제로 공동연구자들과 발표 및 토론 진행
 - 연구과제에 대한 주제별 연구자료 중간발표 및 상호 의견 교류
- 19. 12. 19. 일본 게이오대에서 현지 간담회 실시
 - 주제별 연구자료 발표 및 토론 진행
 - 게이오대학 동아시아연구소와의 연구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20. 1. 13. 중국 산동대에서 현지 간담회 실시
 - 최종 연구자료 및 원고 제출 전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의견 교류
 - 산동대 동북아연구소와의 연구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20. 1. 30.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연구결과 보고서 관련 워크숍 실시
 - 최종 연구자료 발표 및 토론, 연구성과 등 자체평가 실시
- 지정학 및 한반도 역사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는 균형잡힌 시각을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보고서 도출.
 - 평화체제 관련 새로운 분석의 결과를 집대성한 보고서 작성
 - 국제안보 분야: 신성호(서울대 국제대학원)
 - 평화체제 도입 이후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였음. 특히

평화체제 이후 한미동맹의 임무와 역할의 재정립과 변화 가능성,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및 구조변화 가능성,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미칠 영향과 반응 등을 중심으로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이 가지는 지역적 함의에 대하여 고찰함.

- 한국사 분야: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 종전선언 또는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한반도에 상당한 정세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 및 주둔비용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며, 역사적, 비교방법론적 고찰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였음.
- 비교정치 분야: 송지연(서울대 국제대학원)
-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개괄적 논의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본의 기여, 그리고 이후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질서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과 투자에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유럽지역: 한정훈(서울대 국제대학원)
- 1994년 유럽안보협력회의(OSCE)가 한국을 아시아지역 협력 파트너로 초청하면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으며 25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과 OSCE의 협력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모색하였음.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고 OSCE와 같은 정치체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음.
- 일본지역: 니시노 준야(일본 게이오대학)
-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북한의 비핵화 과정 및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첫째로 한반도의 군사긴장이 완화되며 주한미군의 양적·질적 존재가 하향 검토될 것이며, 둘째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고, 셋째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므로, 일본의 안보 정책은 완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중국지역: 필영달(중국 산둥대학)
-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상태유지를 한반도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간주하여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 평

화체제의 2차적 당사자로서 평화구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한 평화협정의 실천방안, 즉 북한의 체제보장 장치 창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보다 명확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분야 기여도

-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논의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단일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에 필수적인 복합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안보환경 변화, 한반도 역사적 접근, 정치경제, 기존 지역협력 사례, 주변국 인식 등 다학제적 분석을 통해 차별화되는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진에 일본과 중국 학자들 뿐만 아니라 역사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 정치학 분과학문 내에서도 안보, 정치경제, 비교정치와 같은 다양한 하위분야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음.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자들을 연구진에 포함하여 사업기간 중 온·오프라인으로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학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일본의 Keio University, 중국의 Shandong University,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내외 학자 그룹을 과거 연구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향후 관련 연구과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확장하였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최근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동시에 미중패권경쟁의 심화로 한반도에서 대내외적인 정세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였음.
 - 본 사업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입체적인 해석과 시각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분과학문 및 국적의 연구진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따라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과제구성 등은 시의적절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 사업의 효율성

-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적 차원의 협력 모색의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차원의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평화체제의 대안을 최종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였음.
- 한중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시각 및 연구자층을 확대하였음.

○ 사업의 영향력

- 급변하는 한반도 질서에 대응하는 최신의 연구를 제시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는 다학제적 분석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학계에 소개하고, 확대하였음.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한반도 문제(북핵문제, 남북 경제협력, 통일논의 등)와 유기적 연결을 통해 연구를 이어나갈 것임.
-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다루는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시킬 예정.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평화체제 전망을 종합한 단행본 출판 잠정 연기

- 연구 진행 중 국내외 및 남북한 관계의 급변으로 연구 성과와는 무관하게 연구 내용의 시의성 및 대중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 2020년도 사업을 통해 2019년도 연구 결과를 보완, 수정하여 단행본을 출판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 향후 계획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한반도 문제(북핵문제, 남북 경제협력, 통일논의 등)와 유기적 연결을 통해 연구를 이어나갈 것임.
-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다루는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시킬 예정.

○ 2020년 신규 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 추진

- 2019년 동북아 및 세계정세의 급변을 고려, 단기적인 통일기반구축에 연연하기보다 중장기적 통일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모색.

- 2019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속의 한반도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한반도 전략과 지역 전략이 어떻게 통합, 조율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방향의 대강을 제시.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박태균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2019년(가을) 통권 106호, pp.67-96)

□ 성과 자율 지표

- 사사 논문 게재 1건: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박태균,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2019년(가을) 통권 106호, pp.67-96)
- 사사 논문 게재 예정 3건: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한미 동맹” (신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일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송지연), “한국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협력: 평화체제 수립 후 전망” (한정훈)
- 단행본 (예정) 1건: “평화체제 이후 한반도 미래전망” (최종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2020년 하반기 출간 예정)

7. 연구 결과 요약

□ 한국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협력: 평화체제 수립 후 전망 (한정훈)

- 한국과 유럽안보협력회의(OSCE)는 1994년 OSCE가 한국을 아시아 지역 협력 파트너로 초청하면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현재 25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OSCE 2015).
- 한국은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 다자안보체제의 경험을 배우고자 할 뿐 아니라 이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함. (서보혁 2009; 신동민 2018).
 - 반면, OSC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자안보체제의 포괄성(inclusiveness) 원칙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협력국의 기여를 통해 OSCE와 협력국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 한국과 OSCE의 위와 같은 협력의 원칙과 역사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의 형성은 두 정치체제가 협력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가능성의 문제 뿐 만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OSCE와 같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정치체제의 참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동북아 평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한반도 상황이 평화체제로 변화하면서 한국과 OSCE의 협력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모색하였음.
 -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그동안 OSCE 경험을 동북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었던 남북한의 적대관계가 해소됨으로써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성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한편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OSCE 경험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이한 경로발전(path development) 과정에서 한국과 OSCE 협력의 목적, 방향, 심화 가능성을 고찰함.
 - 그동안 한국에서 OSCE에 대한 관심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OSCE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 집중되어 왔음. OSCE 설립의 목적, 발전과정, 5개 아시아 협력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OSCE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OSCE의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만이 강하게 작용했음.

- OSCE에 대한 이와 같은 빈약한 이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초한 안보의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중심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있고, 기타 다른 국가 또는 정치체제와의 협력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임.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고 OSCE와 같은 정치체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음.
 - 이러한 연구는 OSCE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화할 뿐 아니라, OSCE 경험을 활용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현실화하는데 기여함.
 - 한국과 OSCE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기초로, 협력의 실무 담당자들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임. 한국은 OSCE의 아시아 협력 파트너로써 OSCE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들을 접촉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방향과 강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져올 지역안보협력의 필요성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점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타당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증하였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일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송지연)

- 한일관계는 양국의 국내 정치요인과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한일관계를 둘러싼 다층적인 논의 중 군사안보 측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두 축을 근간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유지와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반면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꾸준한 갈등과 위기상황을 경험해 왔는데 일본 국내정치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보수주의자/내셔널리스트들이 이러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음 (기미야 2016; Park 2015; Soeya 2010).

-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북일 경제교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국면이 강화되면서 심각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음. 특히 1998년 북한 로동미사일의 일본열도 상공 통과로 일본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 방문시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고백한 것은 북일관계 개선보다는 일본내 대북 여론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옴.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전략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함.
- 중국의 급속한 부상 역시 일본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미일관계 특히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러한 미일동맹 강화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기대하고 더욱 공고화하는 경향을 가져왔음 (신성호 2010: 157). 오바마 정부에서 강화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 과 '리밸런싱'(re-balancing) 원칙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대외방위비 축소를 메워줄 안보파트너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가속화하고 있음 (남광규 2017: 56). 특히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수상의 경우 불안한 동북아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였고, 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군사, 안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현재 트럼프 정부의 역시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김현정, 이기완: 2018).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한국, 미국,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하지만 이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중요한 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을 고려한다면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중국경사론'에 대해서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 역시 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막연한 낙관적인 기대가 가져오는 위협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미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중국 편향적인 정책과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음.
- 동맹파트너인 미국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한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전개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 그러나 최근 한일관계

의 갈등과 위기상황을 고려한다면 양국이 서로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박철희 2017: 449)

-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국내 정치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질서와 연계되어 상당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혼재되어 있음.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갈등과 위기의 한일관계를 고려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에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된다면 한일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됨.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 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외교부에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 (박희락 2018: 173).
-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재 한일관계가 경험하고 있는 상호 불안과 불신의 사이클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서 한일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에 더불어 한일 양국간 불필요한 상호 경쟁적 관계를 종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수 있는 동북아 지역의 위협요인을 크게 억제하는 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음.
- 본 연구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개괄적 논의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본의 기여, 그리고 이후 한일관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질서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과 투자에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박태균)

- 종전선언 또는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이 곧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북미 간에 평화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관계 정상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이는 조만간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평화협정에 어느 나라가 참여하는가는 아직 불투명.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4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주변국이 이를 주장하는 컨벤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현재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에서 평화협정까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을 함.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이후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을 했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주한미군의 문제는 이미 1947년부터 미국 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임.

- 미국의 1차적 전략 요충지가 아닌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필요성이 논란이 되어 왔음. 특히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한미군은 뜨거운 감자로서의 역할을 함. 공화당 행정부는 민주당과는 달리 외부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구해 옴. 아이젠하워 행정부, 닉슨 행정부, 부시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임.
-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핵무기 배치,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중국에 대한 접근, 부시 행정부는 GPR,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증가와 북미 접근 등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들이 나타남.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주둔비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제기되었던 것이 한반도 중립화 방안임.

- 한국전쟁의 정전을 앞두고 중립화 방안은 중요한 내용으로 제기되었음. 이후에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얘기는 다시 재론되지 않았지만, 미국 의회에서 1960년대 초와 1970년대 중반에 재론된 적이 있음.
- 한국 내부에서는 19세기 말 중립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한반도 중립화 문제는 내적으로 분단이 지속되고 있고, 외적으로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논의되는 것이 어려웠음. 또한 한반도 자체의 힘이 약했다는 점 역시 중립화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음.
- 현재의 시점에서 한반도의 내외적 상황은 중립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음. 외적으로 북중 간의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내부적으로 남의 경제적, 외교적 역량과 북의 군사적 역량이 과거와는 다르게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 아울러 북한은 실질적 중립국 상태이고, 남한은 한미동맹을 제외하고는 주변국과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는 스위스나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단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만약 한반도 중립화가 추진된다면, 일단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조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함.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미국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음. 중국의 입장에서 주변국의 안정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평화협정 이후에 한반도 중립화 문제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화협정 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되, 역사적, 비교방법론적 고찰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였음.

□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한미 동맹 (신성호)

○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미 핵 협상 과정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논의되면서 이것이 한미동맹에 가지는 의미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일부에서는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현재 북한을 공동의 주 위협으로 삼는 공동의 인식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존재 여부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됨.
- 일방에서는 한미동맹의 근거는 한국전쟁이 아니라 1953년에 양국이 포괄적으로 맺은 양자동맹에 근거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유엔사해체 문제와는 별개라는 의견이 제기됨.
- 그러나 종전선언에 이어 남북 간 혹은 북미 간 평화협정이나 한반도 차원의 보다 광범함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면 결국 북한을 주 위협으로 삼는 한미동맹의 존속근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함.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평화공존과 체제보장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자신들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됨.

○ 실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작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음.

-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작년 4월 "당장은 절차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정은 하지 않도록 하자"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논의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한바 있음.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같은 달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얼마전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람스 장군은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 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평화협정이 맺어진 후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일으킴.
-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그러나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함.
-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밀접한 상관관계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혹은 주변국 모두가 매우 불확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짐.
-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양립 가능성, 혹은 변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여기에 한국이 주도적인 대안 모색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가능성을 고찰하였음.

- 첫째, 평화체제 수립과정과 이후에 한미동맹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재정립과 변화 가능성.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를 주 목표로 하였다면 북한과의 평화협정 및 한반도 평화체제하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질 수 있는가? 여전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간 군사 충돌을 억제하고 평화협정을 오히려 담보할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동시에 여전히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지역패권 야심을 견제한 지역의 전략적 균형자로서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인가? 혹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억제하고 핵무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역외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여전히 한미동

맹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의 문제를 살펴봄.

- 둘째, 주한미군의 변화하는 역할과 목적에 따라 향후 한미동맹의 구체적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거나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육군 중심의 대규모 지상군의 주둔이 적합할지, 아니면 지상군의 대규모 축소, 혹은 해, 공군 중심의 역외 주둔 형태로 변형되어야 할지, 아니면 혹은 주둔군 개념이 기본적으로 사라지고 협정형태의 군사교류와 협력만으로 변화 될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모색함.
- 셋째,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의 변화에 따른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에 미칠 영향과 이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고찰. 평화협정 이후 한미동맹의 역할과 형태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반응은 어떠한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반응은 어떠한 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이 가지는 동북아에서의 지역적 함의를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강화와 관련하여 고찰함.

□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 (니시노 준야)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음.. 관계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함.

- 현행 절차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중단된다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성취 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것임.
-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지 않으면서 더 긴 시간이 지나면 핵무장한 북한과 인접한 일본은 결국 안보 불안의 주요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임.
-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북한이 취한 모든 조치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의 파괴, 미사일 및 엔진 시험 시설의 포기에 대한 구두 선언임. 북한은 아직 핵 물질이나 핵탄두의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생산 된 핵 물질이나 핵탄두를 처분하지 못했음. 무엇보다 과거와 현재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안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

○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주목할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반도 평화 체제 확립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기울여야함.

- 판문점 선언이 표현한대로 한국 전쟁의 종전 상태가 오면 현재의 휴전 협정에 따라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 된 한반도 현 체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 가게

됨.

- 이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움직임이지만, 전환기에 수반되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상태를 다루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임. 나아가 "한국의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한, 미국, 중국과 관련된 이익을 조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 할 것임. 과도기에 동북아의 국제 정치는 긴장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일본은 다음 세 가지 개발을 준비해야함.

-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결국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의 양적·질적 존재에 대한 하향 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임. 주한 미군은 단기적으로 축소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일본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의 발전을 감시해야함. 주한 미군의 주둔지 축소는 지역 상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비용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둘째, 남북한 평화 협정 체결로 휴전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UNC)는 해체 될 가능성이 높음. UNC는 1950 년 6 월 북한의 침공에 대응 해 채택된 일련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남북한 간의 평화 협정 체결로 그 역할을 끝낼 것임. 이 경우 요코타 공군 기지의 유엔사후방기지를 포함하여 일본에서 7개의 유엔 지정 기지의 역할과 실사가 검토 될 것임.
- 셋째, 위와 함께 한미 연합 방위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 1990년대부터 한국의 "국방의 한국화"가 추진되었음. 이는 주한 미군의 지원을 받는 국방 노력에서 한국 군대의 강력한 지도력을 포함함. 2000년대 후반에는 전시 작전 통제권(OPCON)을 한국 측에 이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되었음. 현재 한미 연합 사령관(미 육군 장성)은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 OPCON 이전이 실현되면 미국과 한국군의 사령부가 크게 바뀔 것이며 한미 연합 사령부는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해산 될 것으로 보임.

○ 이 세 가지 변화는 거의 70 년 동안 존재해온 동북 아시아의 안보 메커니즘의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이 변화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요구할 것임.

- 게다가 한반도 평화 체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은 체제 구축을 돕는 방법에 대해, 즉 한반도와 일본의 평화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임. 일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행동 준비를 해야 할 때임.

□ 평화협정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필영달)

- 한반도는 역사상 미유의 대전환을 맞고 있음. 북미는 하노이 정상회담 시 핵리스트 제출/ 핵검증 인정 등 미국의 부분적 입장을 받아들일 개연성이 커짐.

- 한반도는 위기의 관리 국면에서 평화의 관리국면으로 전환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국의 기본 입장인 쌍궤병행/ 쌍중단과 일치함. 중국의 국익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조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핵문제의 해결 및 군비통제/ 평화체제 돌입/ 북한의 보통국가화/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 전망 등으로 나뉨.

- 핵문제의 해결 및 군비통제는 정전협정과 중북우호협력조약의 개선/ 북미관계의 정상화/ 한미동맹의 재정립/ 한반도 평화의 정착 등 단계로 진행될 것임. 한반도 전략환경의 전환은 동북아국가의 전략대책이 위기관리 무드에서 평화관리의 무드로 전환될 계기가 마련됨.
- 평화체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재정립/ 핵문제의 해결과정/중미 전략관계의 변화 등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재조명이 필요함. 중미전략경쟁격화되는 대환경하에서 한반도국가의 주도를 격상하고 강대국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국의 인식 변화도 필요함.
-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이념적으로 신사고로 북한이라는 전통 거버넌스 방식을 재인식하고 있음. 김일성/김정일과 완전히 다른 통치방법으로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도모하고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새로운 북한의 발전을 맞고환하고 있음. 북한의 빅차인스이며 한반도 대전환의 계기가 됨. 이로 인해 한반도는 비핵화/한국의 경제부진 국면탈피 등 안보/경제 전환의 대계기가 될 것임.
- 한반도의 전략 전환은 한미관계의 대전환을 예고함. 한미동맹은 전무후무의 국면을 맞이해야 함. 한반도의 전환을 통해 남북한이 강대국에 의한 변환대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꾸는 동등한 동반자의 자세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하는 계기도 도래함. 이런 상황하에서 한반도도 70년의 분단 이래 재통합의 관문 앞에 서게 됨.

- 역사상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및 통합국면을 3000년 이래 몇 번이나 겪었고 역사적인 고통과 경험까지 있음. 한반도의 국면전환은 항상 중국에 중대한 전략도전이 됨. 평화국면이 되는 한반도의 새로운 뉴노멀이 중국의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함.

- 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이며 놓칠 수 없는 계기이며, 중국의 국익임. 북한에 대한 압박/실득/동조가 견비되어야 함. 특히 김정은의 비핵화-국가발전맞교환의 기본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함. 말로 되는 비핵화의지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주역은 한국과 중국의 협력임을 명심해야 함.
-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의 참여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해결의 톱디자이너, 창조자의 자세로 한반도신평화국면을 구축해야 함. 단순한 외부환경 조성자의 역할에서 위기관리의 참여자에서 평화메이커/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역내국가의 소통/ 인프라 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함. 한반도 환경 변화는 중국의 국가통일의 계기가 됨. 통합된 한반도는 필히 통합된 중국의 선례이며, 한반도 통합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국가통합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함. 그런데 역내국가의 협조없이 중국의 통합이 불가능함. 한북미의 협조는 중국의 더높은 차원의 강대국으로 약진하는 발도움판이 될 것임.

-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위험요소 관리를 잘 해야 함. 위험요소 관리하는 방법이 각국 외교의 정교함과 슬기로움을 강구하는 것임.
 - 비핵화는 진행되는 과정이며 위험요소가 많음. 특히 검증/리스트 제출 등 불확실성도 있음.
 - 비핵화는 북한의 발전과 미국의 관심 등 연계성이 강함. 김정은과 트럼프이라는 2명의 지도력이 특별한 지도자, 그리고 한국의 진보위주의 국내정치 등 변화의 대상임.
 - 위기상황의 한반도가 강대국과 관련국가를 다루는 경험이 있지만, 평화국면의 한반도가 어떻게 강대국의 역할을 이용하는지도 리스크의 일부분임.